

코스피	2428.57 (+33.31)	코스닥	732.35 (+14.38)
금리	3.285 (-0.045)	환율	1231.70 (-3.80)

[경제종합]  
제조업 겨울잠 깨나  
조선·車·철강 등  
업황전망 밝음  
04



## 日, 민관 손잡고 K배터리 추격... 韓, 공급망 지원 절실

새해 들어 배터리업계의 투자 계획 철회·보류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코발트 등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에 대한 국내 기업의 고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다. 반면 일본은 민관이 손잡고 5조6000억엔(53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K-배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세액공제 등 지원책은 지지부진 한 상태다.



LG에너지솔루션 연구진들이 배터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완성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국내 배터리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한 네 번째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계획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LG엔솔-GM 합작공장 중단설 경제 불확실성에 숨고르기 행보 美 'IRA 광물요건' 시행 코앞인데 韓 배터리 소재, 中 의존도 여전히 정부 지원전략 수정·보완 해야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거시 경제 불확실성으로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 으로서는 GM이 가장 큰 고객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에 GM과 협력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선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투자에 앞서서 신중하게 결정해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GM과 함께한 1공장은 배터리를 작년 말부터 양산하고 있고, 2공장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3공장은 내년 초 중반쯤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공격적인 시장 개척은 주춤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결코 불리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분위기가.

그럼에도 IRA와 관련한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전체 수입액 36억8000만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은 32억3000만달러에 달해 87.9%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64.9%였지만 2019년 74.4%, 2020년 81.2%, 2021년 83.8%까지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90%에 육박해 '미국 IRA 대응'과는 먼 상황이 됐다.

이런 와중에 IRA의 핵심광물 요건 시행 시점은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IRA 세액공제 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국내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 중이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로 IRA 대응에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미국 컴퍼스 미네랄과 6년간 탄산리튬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SK온은 호주·칠레 리튬 생산기업 SQM과 리튬 광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두 달 만에 중국산 배터리 원료 수입량을 낮출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자칫 배터리 주문 생산량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의존 비중이 단기간에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3월 이후 미국 IRA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FTA 미체결국에서 채굴한 광물이라도 한국과 같은 FTA 체결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판단하기로 기준을 완화한 상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위험요소가 있어 업계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IRA 대응은 물론 'J-배터리'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총 5조6000억엔의 민관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밝히며 'K-배터리'를 추격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은 정부가 연초에 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최대 25%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한시적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에 불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해당 전략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대응 부족' 中企, 중대재해법 희생양 됐다

### 檢 기소 11건 중 10건이 '中企' 대기업 대비 책임 입증 수월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만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27일 시행에 들어가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검찰이 경영책임자를 기소한 총 11건 중 10건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오너의 99% 가량이 최고경영자(CEO)를 겸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관련법이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기업들의 경영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총 82건이었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11건 가운데 중견기업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건이 제조 중소기업이거나 건설 중소기업이었다. 기소된 경영책임자는 모두 대표이사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을 물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이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적·재

정적 여력이 부족한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기가 수월해 검찰의 기소도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규모가 적을 수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해당대기업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혐의점을 찾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건수가 작년엔 '제로(0)'였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한돈에 32만원. 질주하는 금값

국제 금값이 9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금한돈의 시세는 32만6000원이다. 1년 전 26만원대에서 약 20% 올랐다. 25일 오전 서울시내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뉴스1

## 공공요금 치솟는데... 한은, 금리인상 딜레마

### 가스 36.2% 전기요금 18.6% ↑ 금리 인상 땀 대출 이자부담까지

올 겨울 도시가스·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물가 부담이 커졌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선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어 내달 금리인상 여부를 두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통계청의 12월 소비자물가동향

을 보면 지난달 도시가스요금은 전년 대비 36.2%, 지역난방비는 34%, 전기요금은 18.6% 상승했다.

◆도시가스·전기요금 더 오른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난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투자보수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

된다. 전기요금도 연료인 LNG비용과 기후환경 비용이 오르면서 지난해 세차레킬로와트시(kWh) 19.3원, 가스요금은 네차레에 걸쳐 메가줄(MJ)당 5.47원씩 인상했다.

문제는 도시가스·전기요금인상으로 2분기까지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대통령, 우동기·장태평·양창수 위원장에 위촉장 수여 /사진 뉴스1  
▲정부, 올해 '디지털플랫폼정부법' 등 210개 법안 제출한다

▲민주, 女 민방위 훈련 주장에 "지지율 올리려 술책"  
▲홍준표 "눈치만 보는 재선 이상 TK국회의원은 모두 물갈이해야"



▲박진, 비건 전 미국무부 장관 등 접견... 한미동맹 의견 교환 /사진 뉴스1  
▲정의당 "정부, 난방비 폭탄 예측 못하고 방치" 비판